

한 차례 이탈했던 6·12 북미 정상회담 본궤도

문 대통령 싱가포르행 가능성 대두

북미 회담→남북미 회담... 싱가포르서 3차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

한 차례 이탈했던 6·12 북미 정상 회담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도 재부상하고 있다. 남북미 3국 종전선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종전선언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도 6월12일 싱가포르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그것이야말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발언은 북미 간 합의의 결과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 여부가 달려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3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날 "3국 정상 간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에서 가능성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안으로 남북 정상이 종전을 선언기로 한 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에 담겼다. 이후 남북미 3국 또는 남북미중 4국 정상이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 판문점 선언 3조3항에 명시 돼 있다. 그러나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과정에서 종전 선언의 주체를 기존 '남북'에서 '남북미'로 확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기존 남북 정상 간의 종전선언이 아닌 남북미 3국 정상이 참여해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졌다. 판문점 선언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 시를 뒤인 지난달 30일 수석 보좌

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남북 정상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이다. 이 같은 3단계 프로세스를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해 '남북미 종전선언'을 이루고,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정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등 2단계로 압축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남북미 3국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미중 3국 정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핵 6자회담(남북미중러일)이 평화협정 체결을 보증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전선언과 뒤따라 수반되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도 맞닿아 있

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지체 없이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일인 다음달 12일에 맞춰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을 점치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사로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를 겪으면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선별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한 북미 실무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한 어떤 접근이 이뤄지느냐 여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나아가 남북미 3차 종전선언의 가능성도 함께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뉴스



평안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28일 오후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군용차가 남북으로 이동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해야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 대표발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고 등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환자안전의 날(5월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일명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故정종현 군이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시행 이후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서울 J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 아직까지도 환자안전사고들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 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 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 환자안전법 시행(2016.7.29.) 이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0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의료기관은 16.5%에 불과했으며, 미보고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가 36.1%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시행일부터 올해 4월까지 보고된 6,755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고 유형은 48.1%를 차지한 낙상(3,247건)이었으며, 다음으로 투약(1,805건, 26.7%), 검사(414건, 6.1%), 진료재료 오염·불량(234건, 3.5%)순으로 나타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 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해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로 되어있지 않고 자율로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일부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할 의무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 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 급변드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판문점 실무회담과 관련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중 가장 큰 사건 '박근혜 탄핵'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앞두고...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도 꼽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퇴임을 하루 앞둔 28일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을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도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의정으로서 다짐했던 고차별정식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 하여 대화와 소통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고 자평했다. 정 의장은 임기 중 성과로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국회의원 특권 내러놓기 추진위원회 발족, 피감 기관 지원받는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법안처리 실적 19대 동기대비 13% 향상, 예산안 처리 관례 정착화, 국회 차원의 초당적 의회외교 지평 확장 등을 꼽았다. 반면 임기 중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며 "6월 개헌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축적해온 개헌 논의와 새 헌법에 대한 법국민적 요구와 열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면서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대결적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다당제에 걸맞은 협치의 모델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 "이제 의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면서 "진정한 의회주의자,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 역사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지방선거 참여 정당에 보조금 460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참여 정당에 선거보조금 등 약 460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대비해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425억6000여만원(7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27억3000여만원(3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4000여만원(2개 정당) 등이다.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35억3800여만원 ▲자유한국당 137억6400여만원 ▲바른미래당 98억8300여만원 ▲민주평화당 25억4900여만원 ▲정의당 27억1000여만원 ▲민중당 8700여만원 ▲대한애국당 3000여만원 등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만398명)에 올해 보조금 계산단기인 1011원을 곱해 산정한다. /뉴스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정운천 의원 화재예방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 을) 의원은 28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산재중기위와 예결위는 물론,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재난특위) 위원으로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정운천 의원은 재난특위 종료일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 온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재난특위 활동을 하며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 화재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제천과 밀양의 화